

기독교학문과 정책 개발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신학과 신앙의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한국교회 위기를 초래한 지극히 개별화되고 사유화되어 버린 개교회주의 현상을 신학과 신앙의 공적 패러다임 회복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개인주의화로 공공성에 입각한 공적 영역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공교회성을

상실한 결과, 각 성도의 개인적 관심이 이익과 축복으로 함몰되어 가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개 교회주의와 성장 지향주의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 성숙분리, 번영복음에 입각한 기복주의 신앙 등에 물들어 강단에서 균형을 상실하고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공동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신학에 기반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독교학문은 어떻게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1. 기독교학문과 공공신학

일반적으로 공공신학의 기원은 1960년대 벨라(Robert N. Bellah)에 의해 시작된 ‘시민종교’(Civil Religion)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Max Stachouse)는 신학이 ‘공적’(public)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삶의 구조와 정책으로 인도될 것이며 공공신학은 본성적으로 윤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민종교의 한 형식으로 마틴 마티(Martin Marty)는 1974년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신학을 연구한 논문에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소개했고, 몇 년 후에 ‘공적교회’(public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미국의 공적인 삶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냈다.

이러한 공공신학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교회의 공교회성과 공공성에 관한 인식 부족과 실천성 부재로 교회 또는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평가는 낮은 현실이다. 실제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에 관한 국회의원 인식조사(2015. 9. 21. 연동교회 발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크리스천 국회의원은 70명, 불교 21명, 천주교 29명, 기타 종교 2명, 종교 없음 25명, 무응답 1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가지 조사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독교가 한국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부분에서 ‘비교적 크게 기여하였다’ 59.3%, ‘크게 기여하였다’ 14.5%

로 총 73.8%가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부분에서는 70.8%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호감이 높은 종교는 천주교로 58%, 불교 56.8%, 기독교 43.2%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호감도는 삼대 종단 중 가장 낮다. 국회의원들도 천주교, 불교와는 친해지려 노력하지만, 근래 여러 문제점과 비리가 난무하는 기독교는 멀리하고 있다. 정치 속성상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성과 전문성(시78:72)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다. 이제 한국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대국가와 대정부를 향한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공신학 즉 공공신앙의 공동체 리더십을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학문이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 개발(政策開發, policy development)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 기독교학문과 정책 개발 사례

1) 저출산 대응 영유아 복지를 위한 교회시설 활용 방안

저출산 문제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청년 취업, 보육 및 교육비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이며, 가장 큰 해결 고리는 청년 취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특정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시설, 즉 건물을 중심으로 시설이나 인적자원, 재정, 조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을 이용하여 영유아복지사업을 실천해 가며, 국가적 과제인 신뢰할 만

한 영유아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1) 종교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내 보육 거점으로 종교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삼아 부모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보육 참여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육정책은 결국 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과 직장 문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례 서울 마포구, 성북구, 영등포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종교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각 구 교회에서는 설립하는 건물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성하였다. 교회 소유의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덜하다. 실제로 해당 구에서는 리모델링과 각종 기자재 등 설치비만 부담하면 된다.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참여 방안(교회 사례) 광양대광고회, 부천새롭교회, 과천소망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업은 영유아와 엄마들을 위한 사역이다. 임신부학교(임신 여성), 아장아장학교(12개월~20개월 영아와 부모 참여수업), 엄마랑아기학교(20개월~36개월 영아와 부모 참여수업), 아가방(시간제 탁아돌봄사역), 어린이집(36개월~7세 아동), 지역아동센터(초등학교 1학년~6학년 방과후 학교), 무지개교실(주말 아동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센터(다문화임산부학교, 다문화 자녀돌봄) 등 여성 및 영유아, 아동들을 돌보는 사역을 다양하게 펼쳐 오고 있다.

신앙의 개인주의화로
공공성에 입각한 공적 영역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공교회성을 상실한 결과,
각 성도의 개인적 관심이 이익과 축복으로
함몰되어가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2)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공동체교회 운동 전개

한국사이버박물관연합회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갤러리처치, 뮤지엄처치 교회운동을 전개한다. 갤러리처치는 교회가 작가와 만남이 있는 작품 전시와 성경유물 특별전시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권을 부여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소통하여 지역 사회와 공간을 공유한다. 앞으로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소통하는 교회의 공교회성회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전국100개의 갤러리처치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실천한다.

3) 북한통일화합나무심기를 위한 한국교회 통일공공정책 KGPM 법인화

한반도를 푸르게 가꾸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과 모든 국민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1인 2그루 심기에 3년 연속사업으로 참여하여 “통일화합나무123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서 이 사업이 한반도 우리 겨레의 생명자원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씨앗이 되어 화해와 평화의 기초를 세우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평화 통일을 향한 통일화합나무심기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한국교회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공정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된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 그루 심기 범국민운동 국회심포지엄(2014년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과 두만강 평화통일화합나무심기 발대식(함경북도 나선시 원정, 조산리 등)을 통해 10만그루 식수운동(2015년 5월 25~28일)을 실시하였다.



특히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단법인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회(KGPM)는 대북지원단체 지정 승인(2015년 7월 30일)을 통일부로부터 받아 대국민, 대국가 공공정책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기독교공정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산림복구를 위해 산림 관련 법령의 개정과 '북한 산림복구 및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주일 국가고시(시험) 평일로 변경 정책 제안 수용 결정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공정책협 모임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주일 국가고시 일정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지금은 주5일제 정착으로 토요일에 학교 교실을 수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요일 시험을 평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으면서, 일반인들에게는 행복 추구 차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5)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 조직 국가 기도회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위로, 한국교회지도자연합 금식기도회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2014년 5월 12일 긴급 기자회견(종로 100주년 기념관)을 갖고 2014년 5월 21일 오전 1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지도자연합 금식기도회를 드렸다. 이날 기도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로마서 12장 15절)는 주제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바라는 금식기도회로 드러졌다. 이날 기도회에 문화체육

관광부 중무실장을 비롯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하여 경청하며 기도했다.

(2)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 교단장들은 지난 2014년 7월 26일 오전 9시 서울 종로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의를 마친 후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농성전막을 방문하여 세월호 대책위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교단장들은 2014년 7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여야 당 대표와 청와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3. 맺는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국가 공공정책에 관해 교회와 학계 등 각자의 분리된 목소리만 있었다. 특히 기독교 학계는 각 영역별 학문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지만 그 연구와 정책적 제안을 실제로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사후 약방문 식으로 급조한 심포지엄과 세미나는 있지만, 이후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했다.

특히 공공정책의 특정 영역에 관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정책 반영 확률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공공

정책에 관해 학제적 접근과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공공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변환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혁시켜 기독교학문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선한 영향력을 갖도록 커뮤니케이션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중요하다. 기독교학문이 사회와 교회에 공공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한국교계에 설명하고, (사)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장 활동가와 연대하며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공정책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기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문과 현장이 연결되는 공공신학의 실천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정책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공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입안부터 집행 그리고 감사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한국기독교 정책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시대를 진단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국가 공공정책을 분석한 공공정책 설교자료를 한국교회에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글 | 장현일

행정학 박사로 현재 생명나무교회 목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자 (사)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소장, 국회국정감사NGO 모니터 단장이다.